
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 방향

2022. 10. 18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 배경 | 1 |
| II . 기존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정책 평가 | 2 |
| III . 새정부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정책 방향 ... | 4 |
| IV . 향후 계획 | 10 |

I. 추진 배경

◇ **(과거)** '19년 日 수출규제는 우리 소부장산업 도약의 계기로 작용

- 日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질서를 흔드는 전례없는 충격이었으나, 우리경제는 민관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
-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, 특별회계 신설, 소부장경쟁력위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對日 위주 유의미한 성과 창출

< 소부장 정책 주요성과 >

- ① 100대 핵심품목 對日 의존도 6%p 감소('19 30.9% → '21 24.9%)
- ② 100대 핵심기술 기준 매출 4,134억원, 고용 2,381명 등 창출
- ③ ①매출액, ②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
* ①매출증가: (전체)16.3% vs. (소부장)24.1% ②소부장 중소·중견 1조원클럽 13→34개사
- ④ IP R&D 연계 의무화로 총663개 중소·중견 특허전략 지원 → 특허출원 1,065건
⇒ "소부장 對日의존도 역대 최저(15.4%) 기록"(7.20일,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 보도)

◇ **(현재)** 러·우 전쟁, 요소 수급난 등 공급망 위기 상시화는 새로운 도전

- 최근 ①코로나 19, ②요소수 사태, ③車 반도체, ④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*, ⑤중국발 코로나 봉쇄 등 연이은 글로벌 공급차질 요인 발생
* 러·우 전쟁의 장기화와 對러 제재로 인해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변 등
- 특히,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중심 경제구조로서 공급망 교란의 타격이 경제전반에 확산 가능

◇ **(미래)** 마중 기술패권 경쟁, 탄소중립 등 글로벌 질서전환에 대비 필요

- 첨단기술을 둘러싼 美-中 간 경쟁은 핵심 제조업과 소부장 산업의 자국유치 및 신뢰 가능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조화를 촉진
* (美) 반도체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, 동맹국과의 첨단기술연맹 추진
(中) 자주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 및 기초 소재·부품·기술 기반 확보 목표 수립
-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수요확대에 따라 첨단 소부장 시장선점 경쟁 및 탄소 기반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전면적 재편이 촉진
* 세계수요 전망('20→'30p): (전기차) 11백만대→227백만대, (이차전지) 288Gwh→3,392Gwh

Ⅱ. 기존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 평가

① (對日 한정) 일본 外 타국가와의 공급망 관계에 대한 고려 미비

- 對日 소부장 의존도가 역대 최소('15.4%)를 기록한 것과 달리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하는 등 기존 정책의 한계 노출
 - * 對中 소부장 의존도 : ('12) 24.9% → ('22.上) 29.6% (4.5%p ↑)
- '20년 「소부장 2.0 전략」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+a로 확대한 바 있으나,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

② (단기적·추격형)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부족

- 과거 소부장 정책은 대일무역 역조개선, 주력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패스트 팔로어 전략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부족
- 탄소중립, 디지털전환 등 미래 유망 먹거리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 필요

③ (고난이도 기술 중심) 요소와 같은 범용품·원소재 관리에 한계

- 기존 고난이도 R&D 중심의 공급망 지원체계는 ①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품, ②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
-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소부장 관리범위 확대 필요

④ (수출 고려 미흡)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역량 부족

-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대다수가 국내 내수 의존적이며 해외진출은 매우 저조(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97%가 수출실적 無)
- 중간재(소재부품)·자본재(장비) 수지가 악화되는 現상황 고려 필요
 - * 무역수지(억불) : [중간재] ('18) 1,742 → ('20) 1,268 → (~'22.8) 1,051
[자본재] ('18) 267 → ('20) 71 → (~'22.8) 1.2

⑤ (혁신 생태계 지속 발전) R&D 혁신체계, 협력생태계 구축 등 지속 필요

- 수요기업 참여와 특허전략 수립 의무화, 상용화 지원 등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한 소부장 R&D 지원체계와 협력생태계 확산은 지속 필요
-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

◆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마련

◇ (정책대상)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유연한 지원 필요

- 커지고 있는 對中 리스크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(A社)
- 최초 선정후, 변경없이 유지된 핵심전략기술의 재검토 필요(B연구원)
- 글로벌 환경 규제(유럽 등) 대응이 가능한 미래 핵심소재 지원 강화(C社)

◇ (R&D) 기존 소부장 R&D 사업의 성과 확산 필요

- 소부장 R&D의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는 수요기업 적용기회가 부족한 중소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(D社)
- 신산업분야는 특히 대형·패키지과제 중심 지원 필요(E연구원)

◇ (글로벌화)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

- 국내 수요기업만을 대상으로는 소부장기업 성장에 한계 → 국내 수요 적용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화 지원 요청(F社)
- 해외 바이어들의 높아지는 요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(G社)

◇ (공급망 안정)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

-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 무역구조상 민간 중심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 →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(H연구원)
-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방안 필요(I社)
- 요소수 수출 금지, 희토류 자원무기화 우려 등 향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필수 소재·부품을 엄선하여 지원할 필요(J社)
- 일본 수출규제 유사상황 발생에 대비한 기술자립화 지원 필요(K社)

Ⅲ.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정책 방향

비 전

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

목 표

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

추진
방향

- ① 기존 소부장 정책대상을 발전적으로 확대·개편
- ② 민간주도, 글로벌 중심의 소부장 협력생태계 확산
- ③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

추진
전략

① (정책대상) 對日/주력산업 중심
→ 對세계/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

- ▶ 핵심전략기술 개편(100→150개)
- ▶ 소부장 범위 확대
- 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

② (R&D) 기존 소부장 R&D 보완

- ▶ 신산업 R&D 투자 확대
- ▶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추진
- ▶ R&D-기반구축 연계 강화
- ▶ 수요기업 참여 확대
- ▶ 표준연계 R&D 의무화

③ (글로벌화) 국내생산기반 확충
→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

- ▶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
- ▶ 글로벌화 사업(인증해외마케팅 등) 연계
- ▶ 기업간 성장사다리 전략 추진
- ▶ '소부장 글로벌화 전략' 마련

④ (협력생태계) 정부중심 수요-공급 매칭
→ 민간주도 연대·협력생태계 확산

- ▶ 대·중소 협력 활성화
- ▶ 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
- ▶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
- ▶ 소재 데이터 디지털화

⑤ (공급망) 공급망 위기 대응력 미흡 →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▶ 위기감지 모니터링 강화
- ▶ 제도적 기반 마련
- ▶ 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 추진
- ▶ 통상협력 강화

① **[정책대상] 對日/對주력산업 중심 → 對세계/對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**

- **(핵심전략기술 개편)**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,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핵심전략기술 대폭 확대(100개 → 150개, **안전2 상세보고**)
 - 기존 對日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의 진행도, 중요도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제외·수정 검토 병행
 -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하여,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

<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(안) >

| 반도체 (17개 → 32개) | 디스플레이 (10개 → 14개) | 자동차 (13개 → 15개) | 기계금속 (38개 → 44개) | 전기전자 (18개 → 25개) | 기초화학 (4개 → 15개) |
|---|--|--|--|--|---|
| (기존) 기초소재, 메모리반도체 중심 ↓ (확대) 패키징 등 공정기술, 시스템반도체 기술 | (기존) OLED 중심 ↓ (확대) XR,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| (기존) 내연차 중심 (수소차 기술 일부 포함) ↓ (확대) 고속베어링 등 전기차 핵심기술 | (기존) 전통 기계산업용 ↓ (확대) 고부가 산업 장비, 기초소재 내재화 | (기존) 상용 이차전지 중심 ↓ (확대) 고성능, 고안전 차세대 전지용 기술 | (기존)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 ↓ (확대) 친환경, 저탄소 (리사이클) 등 |

*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필요 → 바이오 분야 신규 추가(5개)

- **(소부장 범위 확대)** 그간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되어 있던 원소재·범용품을 하위법령*에 개별 소재·품목별로 추가 반영

* 소부장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(소재부품장비의 범위) 개정 추진

- **(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 신설)** 핵심전략기술 확대와는 별도로 핵심 원소재·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
 -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선정

< 핵심전략기술 vs 공급망안정품목 비교 >

| | |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|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점 | | 특정국 의존도 및 국내산업 영향도가 높은 품목 | |
| 차이점 | 대 상 | 고난이도 기술 중심 | 범용품 등 저난이도 기술 포함 |
| | 지 원 | R&D 중심, 세제, 규제패스트트랙 등 | 비축, 수입국다변화, 국내생산 등 |
| | 목 표 | 국내 경쟁력강화 | 공급망 안정화 |

2 (R&D) 기존 소부장 R&D 성공요인은 유지 → 일부 보완점 혁신

※ ①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, ② IP R&D 연계 의무화, ③사업화(실증·양산 평가) 연계 등

- (신산업 R&D)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 하면서,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&D* 투자 적극 확대

* 소부장 R&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2) 99억원, 9.3% → ('23) 242억원, 24.0%

- (소부장 대형 프로젝트)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(과제당 50억원 한도 → 패키지 200억원)
 - R&D를 통한 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다수품목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

< (예시) 수송분야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>

| 핀셋형 품목 지원 | | 생태계 패키지 지원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개별 | 레이저 과제(30억) | → [목표] UAM,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용 4D 라이다 생태계 선점 * R&D에서 실증까지 통합지원 | 소재 | - 화합물반도체 레이저 소재 |
| 개별 | 기계식 스캐너(30억) | | 부품 | - Solid-State 스캐너 개발 |
| | | | | - 고신뢰성 광학기술 부품 |
| | | | | - 탐지 및 충돌회피 센서 복합시스템 |
| 개별 | 디지털신호처리(30억) | | 공정설비 | - 시스템제조 스테이션 |
| | | 실증 | - 라이다 실증평가 장비 | |

- (수요기업 참여 확대)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'1수요-1공급기업 연계' 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'多수요-多공급 투자'로 전환
 - (공통 수요) 공용·확장·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R&D 결과의 파급성·확산성 제고
 - * (예시, 전지) 수산화리튬 등 공통기술은 복수 수요기업 참여시 R&D 지원 우대
 - (1차→2차 수요)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과 2차 수요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재 생태계와 최종재 생태계 연계
 - * (예시, 이차전지) 1차수요(L社, 배터리/중간재) → 2차수요(H社, 완성차/최종재)
 - * (예시, 섬유) 1차수요(H社, 탄소복합재/중간재) → 2차수요(K社, 항공기/최종재)
- (R&D-기반구축 조기 연계)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 기간 단축을 위해 R&D와 기반구축 연계 강화, 동시 기획·사업 추진
 - * (현행) 연구개발 완료 후, 성능·신뢰성 평가 및 실증 연계(가점부여 등) → (개편) 기술개발 과제와 실증화 병행 추진으로 조기 사업화 유도
- (표준연계 R&D 의무화) 불확실한 미래 新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 표준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표준연계 R&D 의무화 추진·국제표준 선점

3 [글로벌화] 국내생산기반 확충 →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

- **(글로벌 협력·진출)** 국내 수요-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&D 등 협력 확대
 - * 해외기관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(금액기준): ('20) 3% → ('23) 10% → ('26) 최대 15%
- **(글로벌화 연계)**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(인증·해외마케팅 등)까지 자동 연계
 - * (현행) 기술개발(KEIT)-사업화(KIAT) 연계로 국내 수요 창출 중점 →
(개편) 기술개발(KEIT)-사업화(KIAT)-글로벌화(KOTRA) 연계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
 -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글로벌 파트너링(GP) 사업* 신설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중점 지원
 - * (현행)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되는 국내 소부장기업 발굴 →
(개편) 국내 우수 소부장 기업의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매칭되는 수요기업 발굴
 - KOTRA, 산업별 협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(37개 정출연) 등 참여 기관의 브릿지형 협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수요의 양방향 진입 지원

<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수요발굴 절차 >



- **(성장사다리 전략)**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*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 육성
 - * 스타트업(중기부) - 강소기업(중기부) - 으뜸기업(산업부)
 - (선정)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부장 강소기업은 으뜸기업 선정시 우대
 - (지원) 강소기업 전용 지원사업*의 으뜸기업 참여 허용 검토 등
 - * 중소기업인 으뜸기업 대상 보증 한도 우대 등을 통한 사업화 자금지원(기술보증기금) 등
- **(수출전략 마련)**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,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'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*' 마련 추진
 - * 주요국가별 소부장 수출여건 분석,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

4 [기업간 협력 생태계 확산] 정부 중심 수요-공급기업 매칭
→ **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**

- **(대·중소 협력 활성화)**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, 실증·기술·인력지원(대학·공공연구 활용) 등 협력 기반 강화
* 공공연구 지원강화 : 융합혁신지원단(37개 공공연구)의 장비·인력·기술 활용 기업지원 강화(年 3,000개사)

< 협력 지원 플랫폼 >

| 구분 | 지원 내용 | 참여기관 | 목표(~'26년)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실증·검증 테스트베드 | 공공연구 등에 테스트베드 구축 → 기술개발 제품 실증·검증 지원 | 화연 기계연 등 37개 공공연구 | 825종 장비구축 |
| 신뢰성 향상 | 공급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컨설팅, 성능개선 지원 | 재료연 한자연 등 40개 연구소·TP 등 | 3,250개사 지원 |
| 양산성능평가 | 상용화 단계 개발제품을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 | 반도체 협회 등 6개 협회·공공연구 | 1,000개 협력 |

- 특히, 개별기업간 수행중인 실증평가를 공급망 내 다수 공급기업이
동시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총 사업화 기간 단축 지원

* (기존) 수요-공급기업 (1:1 매칭) → (개선) 수요기업-공급기업(1차)-공급기업(2차)

- **(민간투자 확대)**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 추진

- (펀드) 소부장 펀드를 지속 확대하여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

*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: 1.6조원 규모(~'22년) → 2.5조원 규모 확대추진(~'26년)

- (투자협력) 민간주도의 유망 소부장기업 발굴·투자 활성화를 위해,
민간투자유치 조건부 기술개발의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확대

*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 및 컨소시엄에 R&D지원 확대('23년 '22년 대비 20%증가)

- **(소부장클러스터 조성)** 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차질없이
추진하고, 지역별 산업 집적도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

* 반도체(경기), 이차전지(충북), 디스플레이(충남), 탄소소재(전북), 기계(경남) → 추가지정 검토

- 설비투자·동반성장 등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
수요기업 중심으로 밸류체인 연계를 강화

- **(소재데이터 디지털화)** 플랫폼 중심 소재데이터 축적·활용 확산*과
데이터·AI 서비스 생태계조성**을 위한 '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' 수립

* 소재데이터 플랫폼(ETRI) : 정부(4개 출연연구)·민관합동 연간 100만건 이상 축적·활용

* 소부장기업 범위 개편,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, 출연연구 DB(250만건 규모) 민간 제공 추진 등

5 [공급망] 공급망 위기 대응력 부재 →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**(위기감지)** 공관·코트라·무역협회·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
 - 16개 업종, 1,718개 품목의 Supply-Chain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연계한 GVC분석시스템 구축 및 위기감지 고도화 추진
 - * **(정성정보)** 해외조직의 인적네트워크 활용 + **(정량정보)** GVC분석시스템의 기업데이터 및 무역데이터 분석 → 전방위적 위기감지시스템 운영
 - 주요품목 관련 수급현황 분석 제공 및 국내외 위기징후 발생시,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(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)
 - 중 코로나 봉쇄, 러-우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지속
- **(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)**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·지원

< 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 주요내용 >

| | |
|------|--|
| 지원내용 | 기술개발,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, 컨설팅, 재고확대, 규제개선, 국제협력 등 |
| 선정절차 | 공급망안정계획서 제출(기업→산업부) → 지원 적정성 검토(산업부) → 산업부장관이 선정 (단, 규제개선 및 특례 포함시 경쟁력위 심의를 거쳐 선정) |

- **(제도적 기반 마련)** 「소부장특별법」 개정*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,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* 「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(추가)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발의(9.8일)

- **(통상협력 강화)** 핵심 광물·원자재 주요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, 협력 대상국 맞춤형 MOU(안)을 마련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 추진

IV. 향후 계획

□ 「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」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마련

| 주요 정책과제 | | 부처·기관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책대상 확대 | ▶ 핵심전략기술 확대('22.10 고시 개정) | 산업부 |
| | ▶ 원소재·범용품을 소재·부품·장비 범위에 추가하도록 소부장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| 산업부 |
| | 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| 산업부 |
| R&D 보완·혁신 | ▶ 신산업 소부장 R&D 투자 확대 | 기재부, 산업부 |
| | ▶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추진 | 산업부 |
| | ▶ R&D - 사업화 간 연계 강화 | 산업부 |
| | ▶ 1수요-1공급기업 연계 → 多수요-多공급 투자로 전환 | 산업부 |
| | ▶ 표준연계 R&D 의무화 추진 | 산업부 |
| 글로벌화 지원 | ▶ 해외 수요-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 | 산업부 |
| | ▶ 기술개발·사업화·글로벌화 연계지원 | 산업부, KEIT, KIAT, KOTRA |
| | ▶ 소부장 스타트업·강소기업·오픈기업 간 연계강화 | 산업부, 중기부 |
| | ▶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마련 추진 | 산업부 |
| 기업간 협력 생태계 확산 | ▶ 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| 산업부, 융합혁신지원단 |
| | ▶ 소부장 펀드 지속 확대 | 산업부 등 |
| | ▶ 민간투자 유치한 기업간 컨소시엄에 정부 R&D 지원 확대 | 기재부, 산업부 |
| | ▶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 | 산업부 |
| | ▶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마련 추진 | 산업부 |
|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 구축 | ▶ 위기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| 산업부,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 |
| | ▶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사업 지원 | 산업부 |
| | ▶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 | 산업부 |
| | ▶ 핵심광물·원자재 협력대상국 선정 및 MOU 체결 추진 | 산업부 |

참고

기존 소부장 대책 vs.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

| | | 기존 소부장 대책 ※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('19.8월), 소부장 2.0 전략('20.7월) 등 |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 |
|-------|--------|--|--|
| ① 대상 | 국가 | 사실상 對日 중심 ※ 「소부장 2.0 전략」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 →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,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 | 對세계 공급망으로 확장 ※ 핵심전략기술 확대(100개→150개) 등 실질적 지원수단 다수 포함 |
| | 산업 | 우리나라 現 주력산업 중심 ※ 소부장 R&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2) 9.3% | 첨단미래산업 확대 ※ 소부장 R&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(산업부) : ('23) 24.0% |
| | 품목 | 고난이도 기술 중심 | 범용품, 원소재 등 포함 ※ 법상 소부장 범위 확대,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등 |
| | 유연성 | 미흡 ※ '20년 핵심전략기술 선정후 변경 無 | 상시적·주기적 변경 가능 ※ 핵심전략기술 주기적 재선정 등 |
| ② 지원 | R&D | 개별기업 지원 ※ 수요기업 참여, IP-R&D 의무화 등 | 관련 생태계까지 지원 ※ 대형 프로젝트, 다수 수요기업 연계, 표준연계 R&D 의무화 등 |
| | 사업화 | 연구개발 완료후 연계 | 동시 기획·사업 추진 |
| | 수출 | 고려 미흡 | 글로벌화 전략 마련 ※ 글로벌 진출 사업까지 연계 지원 |
| | 협력 생태계 | 지정품목 중심 협력 ※ 100대 품목 신속한 공급망 구축 | 시장수요 기반 협력 ※ 민간투자 확대, 경쟁제도 도입 등 |
| ③ 방 식 | | 사후 대응 중심 ※ 日 수출규제, 요소수 수급난 등 | 사전 대응체계 구축 ※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|